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폐기 심사보고서

2026. 10.

국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10월 2일, 진성준의원 외 16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26.1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10.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26.10.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진성준의원)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대한민국 국

군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로 인한 장병 피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히려는 것임.

아울러 북한군이 우리 지역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정전협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하고, 지뢰의 종류와 출처, 매설·유입 경위 및 시점,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단호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 ☐ 지난 9월 21일 DMZ 내 MDL 남쪽에서 수색로 개척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2015년 지뢰도발 이후 10년 만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힘.

북한군 지뢰의 종류·출처와 매설·유입 경위 및 시점,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함.

□ 동 결의안은 모두 5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북한당국이 이번 지뢰 폭발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북한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DMZ 일대에 대한 면밀한 지뢰 탐지·점검과 장병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북한의 재발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 장병과 그

|                                                                 |
|-----------------------------------------------------------------|
|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

□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규탄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주문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은 우리 군 장병들이 군사분계선 인접 DMZ에서 정상적인 작전 수행 중 지뢰 폭발로 인하여 중·경상을 입은 사안으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2015년 DMZ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DMZ 일대에서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에 명확한 경고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지뢰폭발사고의 사실관계 규명, 책임 인정 및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취지로 보임.

□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DMZ 일대 장병 안전대책 마련 촉구(주문 제3호)와 관련하여,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DMZ 일대의 지뢰 및 폭발물 위험에 대한 탐지·점검과 작전지역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북한의 도발 억제 촉구(주문 제4호), 부상 장병과 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대책 마련 촉구(주문 제5호)와 관련하여,

DMZ는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유엔군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건의 조사 및 대응책이나 재발 방지 및 도발 억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상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개인별 필요에 맞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6. 소위원회 심사내용

나경원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및 진성준의원 외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을 제안함.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